

## 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

정지웅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김일성 사망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북한 붕괴론에 대한 논쟁을 시기별로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1) 동구권 붕괴와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2) 김정일 뇌졸중, 그리고 재스민 혁명 이후, 3)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등장 이후 등으로 나누어 사안별로 북한 붕괴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거와 이에 반론을 펴는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북한붕괴론 논쟁을 분석하여 보다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펴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다양한 내외적 환경에 의해 북한 붕괴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 붕괴론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의 끊임없는 정치 경제적 접촉 및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김정은 정권, 북한 붕괴, 북한 생존, 내구력.

---

\* 이 논문은 201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NRF-2014S1A5A 8016012).

## I. 들어가며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지금까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논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건재하다. 당분간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반체제집단에 의한 정변이나 민중 봉기에 의한 붕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혹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정권이나 체제 붕괴가 국가 붕괴는 아니며, 한 정권이 붕괴되어도 새 정권이 출현할 것이고 그 정권은 남북 관계가 정색된 현재로서는 아마도 친중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정책의 집행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붕괴론에 대한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붕괴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첫째, 정권 또는 정부가 무너지는 것. 둘째, 체제 또는 정치경제구조가 무너지는 것. 셋째, 국가 또는 국민이 무너지는 것. 이를 북한에 적용하면, 김정은 정권의 붕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붕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본고에서 다루는 붕괴론자들은 어느 한 붕괴에 한정하지 않지만 그

1) 이재봉, “북한 붕괴,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프레시안』, 2014년 8월 22일 기고문. 전경주도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과 대비』 (서울: 살림, 2012)에서 국가차원, 체제차원, 정권차원으로 나누어 붕괴를 설명하고 있다. 놀랜드는 심달섭 옮김,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서울: 시대정신, 2004), p. 26에서 경제 체제의 붕괴, 정치체제의 붕괴, 주권국가로서의 붕괴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체제의 붕괴는 국민을 생물학적으로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수준 이하로 생산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제적 해체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정치체제의 붕괴는 국가권력의 사용과 접근을 통제하는 제도와 공식, 비공식 절차와 규칙에 구현된 원칙과 정치규범들이 붕괴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주권국가로서의 붕괴는 나라 자체가 타국가의 식민지가 되어 사라지거나

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일성 사망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진 북한 붕괴론에 대한 탐구를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한 지면상에서의 직접적 논쟁은 많지 않았다. 2014년 포린어페어 지에서의 수미 테리와 존 딜러리, 문정인 교수의 논쟁, 전현준의 “북한 붕괴 문제에 대한 논쟁” 등이 직접적 논쟁이었다. 물론 학술회의나 각자의 논문에서 붕괴론과 반붕괴론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였다. 본 연구는 이미 제기된 북한 붕괴론 주장들과 그 논거를 정리할 것이고, 이어서 붕괴론에 대한 반론을 정리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을 정리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붕괴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sup>2)</sup>

## II. 동구권 붕괴와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이후 논쟁

북한 붕괴론은 동구 공산권이 붕괴되던 1990년대 초와 김일성 사망 때 대두되었고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더욱 확산되었다. 동구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이상화 작업으로 인해 살아생전 이미 신격화에 이른 김일성의 죽음은 김정일의 능력 부족과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2)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붕괴론을 다루기 때문에 그 시점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참고자료가 오래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양해를 미리 구한다.

## 1. 김정일 능력 논쟁

당시 붕괴론 논쟁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후계자인 김정일이 과연 김일성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는데, 당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 시기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일성이 사망하였을 1990년대 당시, 최평길이 연구한, 북한 붕괴에 관한 한반도 전문가 5개국 50명의 외국학자와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북한이 붕괴하여 서기 2000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고 하였다.<sup>3)</sup> 또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며, “북한은 붕괴에 직면해 있다”고 장담했다. 즉 그 당시의 붕괴론의 논거는 김일성 사망의 결과로 권력투쟁의 강화, 내란 발생,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적 도전, 경제문제의 대두 등으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sup>4)</sup>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의 정치 경력이나 권위를 비교해 볼 때, 아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하나의 논거였다. 비록 김정일이 1980년 북한에서 공식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해도, 1990년대 초반까지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즉 김정일은 성격이나 자질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도 아버지의 후광과 부자세습 체제에 의해 최고 권력자가 된 인물로서 북한의 위기를 관리해 나가지 못하거나,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저항세력의 도전에 의해 축출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sup>5)</sup> 1997년 2월 황장엽 조선로동당 비서가 북한을 탈출하자 ‘북

3) 최평길, 『미리보는 코리아 2000』 (서울: 장원, 1994), p. 40. 그런데 통일된다고 한 2000년을 지나 2017년 된 지금, 북한체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4) 위의 책, p. 161.

5) Foster-Carter(“How Long Can North Korea Go On Like This?,” *The Economics of Korean Reunification* 2, no. 1(1997) pp. 28-35)와 Eberstadt(“The End of North Korea Washingt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99))는 북한이 지속가능하

한 붕괴론'은 절정을 이루었다. 그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당선자가 첫 통일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을 쏟아냈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붕괴되어 통일되면 북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이 빠지지 않았다.<sup>6)</sup>

여기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란코프는 동유럽의 경우 소련이 위성국가들을 군사력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지자 도시의 교육 받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엘리트들은 잘 단결되어 있다고 본다. 다수가 혈연관계이며 항일 게릴라의 후손들이며 통일이 되면 자신들이 입지가 어려워질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sup>7)</sup> 또한 놀랜드는 소수민족이 지방도시 티미소이라에서 일으킨 민란이 차우세스쿠 체제의 종말을 가져왔는데 북한에는 루마니아처럼 인종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sup>8)</sup> 또한 그는 북한의 김씨 왕조는 주체사상과 민족주의를 효과적으로 융합시킨 것으로 본다. 김정일 체제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대 세력에게 돌리는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sup>9)</sup>

에버스타트에 의하면 혁명 전 단계 상황의 모든 국가가 혁명을 겪는

---

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주장을 펼쳤다. 또한 김경원은 『출구는 없다』에서 김정일은 무능하다고 판단하는 계파의 연합에 의해 축출될 것이라 했고, 안병준도 “The Man Who Would Be Kim” *Foreign Affairs* 73, no.6: 94-108)에서 개혁주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또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무너지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통일연구원(Evaluating the Crisis Level and Prospective Regime Durability in the Communist Regime of the DPRK, 1996)에서도 북한은 체제 위기의 결정적 한계를 넘어섰으며,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2001-2008년 중에 체제 전환 임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마커스 놀랜드, 앞의 책, pp. 44~46.

6) 이재봉, 앞의 기고문.

7) Andrei Lankov, “Pyongyang: Rules of Engagement,” *Pacific Review* 16, no.4: pp. 617~626.

8) 마커스 놀랜드, 앞의 책, pp. 32~33.

9) 위의 책, p. 36.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sup>10)</sup> 브린톤에 의하면 고조된 긴장이 범죄, 정치 불안 또는 혁명으로 전환될지는 집권자의 정통성 유지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엘리트 집단의 충성심과 국가적 신화의 상징적 해석권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sup>11)</sup> 북한의 경우 엘리트 집단의 충성심과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최고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일은 소위 3년간의 유훈통치라는 것을 끝내고 본격적인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 붕괴론에 대한 반론을 편 분들의 평가가 옳았다.

## 2. 경제위기 논쟁

붕괴론자들의 또 다른 논거는 1980년대에 이미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던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의 개막과 더불어 급속히 진전된 사회주의권의 몰락, 중국과 소련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방관과 외면 등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었으며 이 같은 급속한 상황의 변화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를 부채질하여<sup>12)</sup> 체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김일성 사망 후 자연재해로 인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의 경제난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였다.

1996년 12월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존 글렌 상원의원은 국방 정보국의 1996년 6월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북한이 향후 15년간 현재의 국가로 존속할 확률은 낮거나 중간 수준이다. 북한의 경

10) Nicholas Eberstadt, “Is Contemporary North Korea a ‘Pre-Revolutionary Polity?’,” *A Summary of Finding*, Photocopy (March) 참조.

11) Crane Brinton, *Anatomy of a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66) 참조.

12) 통일부 통일교육과, “북한붕괴론,” 검색일 2016년 2월 13일;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0&dicaryId=97&searchCnd=0&searchWrd>)

제문제에 대한 해답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존 도이취 중앙정보국 국장은 “북한은 심각한 경제문제로 인해 한국을 공격하거나 자체적으로 붕괴 또는 내파할 것이다”라고 했고 제임스 라니 주한 미국대사조차도 “북한이 불가역적인 정치경제적 쇠락의 길로 가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은 김일성이 만든 체제의 붕괴를 관리하는 것”이라 언급하였다.<sup>13)</sup> 개리 럭(Gary Luck) 주한 미군사령관은 1996년 3월 하원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과 식량난을 볼 때 붕괴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이라고 증언했다.<sup>14)</sup> 통일부 산하 민족통일연구원은 1996년 펴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 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제적인 경제협력 관계가 미약하며, 식량과 유류 등 안보자원을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붕괴 요인으로 들면서 2001~2008년 사이에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서 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자기 국민들을 먹이지도 못하는 정권은 당연히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보급체제는 붕괴되었으며 스스로 시장 경제활동을 해 본 적 없는 주민들이 대량 아사하자 자연스럽게 붕괴론이 대두된 것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붕괴 논의는 2000년대에 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도 2009년 7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북한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13) 마커스 놀랜드 앞의 책, pp. 47-48.

14) 이재봉, 앞의 기고문. 이재봉은 이 글에서 워싱턴에서 흘러나오는 북한 붕괴 및 전쟁 도발 가능성에 관한 주장은 남한에서 반미감정과 함께 일고 있는 주한 미군 철수론을 잠재우고 남한 정부에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남한에 무기를 더 많이 팔기 위한 속셈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미 양국은 기다리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캠벨 차관보와의 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완전 붕괴’를 거론하는 등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은 북한 붕괴와 급변사태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sup>15)</sup>

한편 이 시기 북한 붕괴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논설위원인 시게무라 도시미츠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으며, 지도층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북한의 시스템은 여전히 견고하며 식량난도 체제 붕괴를 거론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sup>16)</sup> 당시 내한한 폴리 前 미하원의장도 북한이 단시일 내에 붕괴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sup>17)</sup> 또한 한스 마레츠키 前 평양주재 동독대사는 1991년 4월 10일 서울대 강연에서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제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의 근대화가 가능한 향후 3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급속한 붕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sup>18)</sup>

박한식은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박탈한 이유만으로 붕괴한 국가는 인류역사상 거의 없으며, 경제문제가 체제의 정통성 위기를 가져와야 하고 지도자가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어야 붕괴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체제의 정통성과 경제상황은 무관하며 북한에서는 오히려 경제생활이 현저하게 평등화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안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9)</sup> 한편 마커스와 미첼은 북한이 1990년 이

15) 『세계일보』, 2013년 2월 26일.

16) 『중앙일보』, 1997년 6월 13일. 자세한 내용은 시게무라 도시미츠,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신지호 역』 (서울: 지식공작소, 1997) 참고.

17) 『중앙일보』, 1997년 3월 20일.

18) 『동아일보』, 1991년 4월 11일.

19) Han S. Park, Human Needs, Human Rights, and Regime Legitimacy. In *Understanding Regime Dynamics in North Korea*, ed., Moon Chung-in.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8), p. 224.

후부터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지만 생존 식량배급 유지에 필요한 외부 지원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으며(매년 10-20억불 수준), 각기 다른 이유로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았던 이웃국가들이 어렵지 않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체제유지가 가능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sup>20)</sup>

### Ⅲ. 김정일 뇌졸중, 그리고 재스민 혁명 이후 논쟁

#### 1. 김정일 뇌졸중 이후 혼란과 경제난 논쟁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8년 8월에 다시 북한 붕괴론이 제기되었다. 이 시기 붕괴론의 논거는 김정일이 쓰러졌다고 하는 사건에 바탕을 둔 아주 단순한 논리였다. 북한은 1인 독재체제인데 이 독재자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또한 후계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논리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 통일은 아마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sup>21)</sup>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비해 북한의 정권 붕괴와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게 봤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은 2010년 2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무너진 김정일 상태와 북한경제를 거론하며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sup>22)</sup>

20) 마커스 놀랜드, 앞의 책, p. 50.

21) 『경향신문』, 2011년 6월 21일.

22) 『세계일보』, 2013년 2월 26일.

이 당시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거를 요약하면 김정일은 17년간 유혈과 테러와 폭력과 집단 아사로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과 질곡만을 안겨주었고, 수십억 달러의 돈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함으로써 300여만 명의 북한 주민을 굶어 죽게 한 장본인인데 이제 그가 쓰러졌으니 장악력도 약해질 것이고 북한체제가 붕괴되리라는 것이다.<sup>23)</sup>

한국은행도 2009년과 2010년 북한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경제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여 5·24경제조치로 북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대해 이정철은 북한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지만 일정한 회복세에 놓여 있고 당국은 경제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력과 관리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sup>24)</sup> 정은미는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가 위기임과 동시에 그 공백을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가 채워가면서 역설적으로 경제난을 그럭저럭 버티게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남북교역과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지만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중교역의 규모는

23) 김석우·홍성국은 저서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서울: 기파랑, 2010)의 2장에서 급변사태로 치닫는 이상한 움직임들이라는 장을 설정하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정리하면서 독일 통일을 예로 들어 서독처럼 강대국 정치, 외교적 기류를 잘 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관용은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서울: 경덕출판사, 2006)에서 북한 붕괴는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대표저자인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에서 북한에 닥칠 사태는 곧바로 한국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기에 급변사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유호열은 정치·외교 분야에서서의 북한 급변사태 유형과 대응 방안, 백승주는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 차원 대비 방향, 남성욱은 한반도 급변사태와 우리의 효율적 대응 방안(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서재진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사회·문화 부문의 대응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24) 이정철, “대북 제재와 북한의 개혁 퇴행, 인과관계의 검증 -시장 위축 vs. 시장 통제,” 『북한연구학회보』, 16권 1호 (2012년 여름), p. 93.

해마다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고 황금평 및 나선항 개발은 북중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며 북중 경제협력은 유례없이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결국 현실에서는 북한의 붕괴가 임박하거나 급변사태가 도래하지도 통일이 가까워지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5)</sup>

또한 반론자들은 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통치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며 체제 장악력은 여전하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논리적으로 보면, 북한의 명백한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체제 변화를 야기하겠지만 그러한 변화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석한다.<sup>26)</sup> 또한 반론자들은 카튼(Cotten)의 주장 즉, 동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시민사회 출현의 기초가 북한에서는 미약하다고 일단 전제하고 있다.<sup>27)</sup> 김계동은 경제난이 체제 붕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이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면서 조직화돼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불만이 생기더라도 이를 조직적인 저항으로 이끌 수 있는 시민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가 어렵다고 주장한다.<sup>28)</sup> 또한 불만이 쌓이더라도 워낙 억압이 심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저항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은미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 부문과 사회문화 부문의 개방화 수준은 비교적 높은 반면에 정치 부문의 개방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

25) 정은미,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북한 정세 변화와 전망,” 2011년 11월 29일 북한전략연구센터 주최 학술세미나 토론문, p. 29.

26) William J.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마커스 톨랜드, p. 49 재인용.

27) James Cotten, “Civil Society in the Political Transition of Nor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정치웅, 『통일학』 (서울: 태민, 2014), p. 146 재인용.

28) 김계동, “북한 붕괴론과 생존론,” 『국민일보』, 2014년 5월 16일.

타났다. 즉 사회경제 부문의 개방은 정치 부문의 개방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생존과 위기의 관리 차원에서 북한 당국은 사회경제 부문의 개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으나 정치 부문의 개방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9)</sup> 이처럼 북한에서 구조적 원인과 심한 탄압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한 이러한 요소들이 아사자들이 속출해도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한 요인이 된다고 붕괴 반대론자들은 주장한다.

## 2. 재스민 혁명의 북한 적용 논쟁

이러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중동의 재스민 혁명이 한창일 때 북한에서도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특히 방송과 언론에서는 탈북자 출신 학자들과 보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다.

안찬일은 “리비아와 북한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정학적 조건만 빼면 국내정치(장기집권)와 군사제일주의, 족벌정치와 부정부패, 빈곤 등 다방면적인 분야에서 두 체제는 공통점이 너무 많다”고 하며 북한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였다.<sup>30)</sup> 이영일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재스민 혁명은 김정일에게 두 가지 위기 요인을 발생시켰다고 피력한다. 하나는 재스민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이 예외 없이 김정일의 불법무기 판매나 아편 판매의 주요 고객들로 김정일은 이 루트를 통해 지금까지 통치자금을 마련해 왔는데 이 돈줄이 막혀버렸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위기로인은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민주항쟁의 주요 명분의 하나로 정권을 자식에게 넘겨주려는 부자간 권력세습 반대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그의

29) 정은미,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와 분절적 구조,” 『북한연구학회보』, 16권 1호, p. 161.

30) 안찬일, 2011년 11월 29일,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가 주최한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북한 정세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

아들 김정은으로의 후계세습은 결코 연착륙할 수 없는 내외정세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체제 붕괴를 논하는 이들의 또 다른 논거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도덕적 근거에 기반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송영대는 아랍 민주화 열풍에서 나타나듯이 독재체제는 반드시 붕괴된다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남북한 동포들은 이번 기회를 북한 민주화와 한반도의 평화의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1)</sup> 한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하려다 실패했지만 결국 카다피가 궁지에 몰린 것은 역사적 흐름으로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항상 눌러만 살던 민초들이 독재 권력에 맞서 쫓겨난 것으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지에서 1인 독재의 종언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민중투쟁의 불길은 나날이 번져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오래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sup>32)</sup>

북한에서도 재스민 혁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08년부터 3년간 북한 주재 영국대사로 재직했던 피터 휴즈 대사는 2011년 9월 2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동의 사건들이나 외부소식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sup>33)</sup> 그리고 집단의 반발이 전혀 표출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은 아직 그런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중심이 형성될 수도 없고, 그룹이 모이기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

31) 송영대, “북한의 사망과 북한의 장래,” 자유아시아방송 칼럼. 2011년 12월 21일.

32) 이영일, “자스민 혁명과 김정일의 위기,” <<http://blog.daum.net/rh201/16264795>>.

33) ‘이집트 대통령이 사임했다’ 정도의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만 오고 갈 뿐이라고 하였다.

도 여행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애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 대응이나 반발이 있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sup>34)</sup>

정은미는 루마니아는 북한과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닮은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루마니아와 같은 민주화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루마니아의 경우 주민들이 동부유럽의 ‘민주화 도미노’에 영향을 받았고 종교적 자유 등 최소한의 자유를 누렸지만, 북한 내부에는 조직된 인민들이나 세력이 전무하고 최소한의 결사적 자유나 종교적 자유조차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어 있지 않고 공산당의 일당독재가 유지되고 있는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결과를 낳게 한 차이점이었다고 분석한다. 즉 중동에서 불어오는 민주화 바람은 중국 대륙을 넘으며 철저하게 차단되어 북한에 닿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 사회에서 SNS에 의한 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다고 평가한다.<sup>35)</sup>

정지웅도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국가의 붕괴는 가난보다는 부패 정도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북한의 가부장적 정치문화, 종교국가화, 그리고 한국민의 특성 등도 북한체제 유지에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한다.<sup>36)</sup> 이영일은 동독이나 이집트나 튀니지, 리비아에서 인민들이 봉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사회가 북한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이며 최소한 아사(餓死)를 면할 만큼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지식과 정보의 유입이 거의 차단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전체주의 사회통제의 전형인 작업 단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인

34) 2011년 9월 28일, 피터 휴스 평양주재 영국대사 초청 관훈토론회 중에서.

35) 정은미,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북한 정세 변화와 전망,” 2011년 11월 29일,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가 주최 학술세미나 토론문, p. 28

36) 정지웅,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북한 정세 변화와 전망,” 2011년 11월 29일,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가 주최 학술세미나 토론문, p. 32.

민들은 학업을 마치고 동시에 직장에 배치되며 배치된 직장에 농노처럼 묶여 생존을 유지해야 한다. 조직에서의 이탈은 죽음을 의미하며 조직적 상호감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불안을 야기할 주민들의 조직적 봉기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37)</sup>

또한 반론자들은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의 공통적 결론은 경제위기의 지속과 정치적 불만 그리고 권력엘리트의 분열과 민주화의 외부 요인이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이에 비춰본다면 북한은 오래전부터 경제위기와 정치적 불만이 존재해왔지만 아직도 이를 조직화하고 대안화할 수 있는 엘리트의 분열이나 정치세력화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 동구나 지금 중동지역과 달리 외부 정보의 유입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주변국의 민주화 도미노도 중국이 아직 체제 전환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을 움직일 만한 외부요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냉정하게 본다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조건이 존재하지만 붕괴의 촉발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한다.<sup>38)</sup>

## IV.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등장 이후 논쟁

### 1. 김정은 리더십 논쟁

김일성이 사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 또다시 북한 붕괴 임박론이 있었다. 이 당시 붕괴론자들<sup>39)</sup>의 논

37) 이영일, “자스민 혁명과 김정일의 위기,”; <<http://blog.daum.net/rh201/16264795>>.

38) 김근식, “북한붕괴론이라는 유령,” KPI칼럼, 2011년 3월 3일.

39) 박창희, “북한 급변사태 시 중·러협력과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56호

거는 독재자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은 되었으나 그가 김정일처럼 강력한 권력자로 부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정은을 수령(首領)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한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주민 불만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군부나 당내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질 경우 김정은 세습체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군 장성들이 공안기관의 철저한 감시로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변하면 권력의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붕괴론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sup>40)</sup>

유엔의 제재결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난이 가중되고 후계수업 과정이 거의 없는 김정은에 대해 그의 리더십을 옹위할 내부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은 주변에 이른바 혁명 유자녀들을 간부로 들어앉히고 있지만 이들로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승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 곁들여 부자간의 정권세습을 반동시키는 국제적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sup>41)</sup> 대부분의 논거를 요약하면 김정은 제1비서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권력엘리트들을 장악하지 못한데다 정책 혼선까지 빚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리영호 숙청과 2013년 12월 장성택이 처

---

(2012); 정병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실존철학적 접근,” 『통일전략』, 12권 2호(2012); 정재욱, “북한 급변사태와 보호책임(R2P)에 의한 군사개입 가능성 전망,” 『국방연구 194, 신진연구논문집』, 제55권 4호(2012), 한병진, “독재정권 몰락의 급작성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가전략』, 제18권1호(2012) 등이 이 시기의 연구이다. 전경주는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과 대비』(서울: 살림출판사, 2012)에서 급변 논의가 재가열되고 있다고 하면서 급변의 정의와 유형, 급변 발생 가능성, 급변 발생에 따른 주요 이슈, 급변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등을 다루고 있다.

40) 송영대, “북한의 사망과 북한의 장래,” 자유아시아방송 칼럼, 2011년 12월 21일.

41) 이영일, 앞의 글. 그러나 그는 이 글에서 북한이 중동국가와 다른 점을 피력하면서 북한붕괴론 논거의 한계를 또한 지적하기도 한다.

형되고, 이후 현영철까지 숙청된 후, 계속해서 붕괴 임박론이 제기되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대다수의 북한 권력자들이 5~60대인데 그동안 장성택이 이들과 30대 김정은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바른 말을 해주고 제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는 “장성택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김정은이 마음대로 날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sup>42)</sup> 붕괴론을 주장하는 이들<sup>43)</sup>의 가장 큰 논거는 김정은이 군부 인사들을 계속해서 숙청하거나 물갈이하고 급기야 고모부인 장성택까지 처형하는 것이 체제 불안정의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 시기에도 붕괴론의 도덕적 논거는 역시 존재한다. 오바마는 유튜브와의 대답에서 북한은 가장 고립되고 많은 제재를 받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단절된 나라이며 잔악하고 강압적이며 국민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는데도 국가재정은 주로 국방비에 투입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나라라고 평가한다. 그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도 조금씩 계속 높일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북한에 들어가고 확산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군사 행동은 지척에 있는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위해 정보를 촉진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42) 강철환, “장성택 실각은 김정은이 망하는 길,” 『뉴스 바로』, 2013년 12월 6일.

43)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은 『2015년 김정은 급변 터질 것인가』(늘플러스, 2014)에서 당분간 북한의 급변사태는 없을 것이지만 북한의 급변사태가 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인에게 북한 급변사태가 왜 중요한지, 급변사태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급변은 왜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 왜 2015년을 주목해야 하는지, 터진다면 어떤 형태일지, 터지면 한국과 세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윤생은 『준비된 통일 대박의 조건』(서울: 포럼, 2014)에서 통일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면서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김영환·유재길·오경섭은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전략』(서울: 백년동안, 2015)에서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추진 방안에 대해 다루면서 흡수통일만이 유일한 통일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말했다.<sup>44)</sup>

그러나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013년 6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과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선불리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선 김정은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내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이미 다 구축해 놓았다”고 말했다.<sup>45)</sup>

전현준은 “김정은의 경험 유무는 별문제가 안 된다. 핵문제나 미국문제만 보더라도 강석주를 비롯해 1980년대 후반부터 활동한 노회찬 관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만 보더라도 북한은 전통적으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 왔고 김일성 빨치산 시기부터 난국 돌파를 위해서 반드시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였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난관을 돌파함과 함께 상황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북한의 ‘빨치산식’ 생존전략으로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붕괴론을 일축한다.<sup>46)</sup> 정성장도 장성택의 숙청 이후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전례 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로의 권력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sup>47)</sup>

## 2. 경제난 논쟁

이 시기에도 경제난으로 북한이 흔들릴 것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의 배다른 형 김정남은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북한 수뇌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붕괴됐다”며 “나이든 리더, 경험이 부족한 후계자,

44) <https://www.youtube.com/watch?v=DfMBQcbCXgU>, 검색일 2016년 11월 21일

45) 『연합뉴스』, 2013년 6월 15일.

46) 전현준, “북한 붕괴론의 허상,” 『통일뉴스』, 2013년 6월 24일.

47) 정성장, “장성택 숙청과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경제문화포럼 발표문(2013.1) 참고.

실추한 경제… 북한을 둘러싼 정국은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에서 돈 버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고위층에 상납하지 않을 수 없는 뇌물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부패한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한다.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을 연상시킨다”고 진단했다.<sup>48)</sup>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절했다”면서 “화해의 길은 멀고, 통일의 길은 더 멀게만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당장 내일 아침 붕괴될지 어떻게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포보스지를 인용<sup>49)</sup>하면서 “옛 소련과 동독의 정치 경제체제가 건설했다면 둘 다 현재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며 “북한 경제체제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미 컬럼비아대학 웨더헤이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곧바로 핵무기 확보, 군대 해산, 난민 급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관련국들은 얼마 되지 않아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sup>50)</sup>

한편 이 시기 붕괴론의 특징은 그 근거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봉쇄와 북중관계의 이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성택 처형이후 북중관계를 말아 온 장성택의 역할이 사라짐으로 경제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중국까지 경제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위기가 더욱 가중되리라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sup>51)</sup> 북중관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

48) 『데일리 NK』, 2012년 2월 9일.

49) 포브스는 옛 소련은 고르바초프가 경제를 뺏길하고 대담한 정치개혁을 하면 소련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오만에 무너졌고 동독도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을 해고하면 될 줄 알았던 오만으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슈미트 구글 회장을 부르고, 해외 투자를 허용할 것처럼 제스처를 취한 것 등이 앞서 소련이나 동독과 유사하다고 한다.

50) 『오늘의 한국』, 2014년 8월 4일.

할 수 있다.<sup>52)</sup>

반론자들은 김정일이 어리기는 하지만 할아버지 김일성의 사상강국, 아버지 김정일의 군사강국에 이어 자신은 경제강국을 이루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에 대하여,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체제가 붕괴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부유한 서방세계의 잣대로 보면 북한이 저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지만 북한 주민들은 빈곤이 체질화돼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난을 덜 느낄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은 두 끼 먹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만 두 끼만 먹던 사람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북한에는 빈부 차이가 별로 없는 총체적인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낀다고 한다. 대체로 경제난이 체제 붕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이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면서 조직화돼야 하는데, 북한에는 불만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불만이 생기더라도 이를 조직적인 저항으로 이끌 수 있는 시민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가 어렵다

51) 정덕구·추수룡, 『기묘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서울: 중앙북스, 2013)는 바로 북중관계의 변화를 둘러싼 다각도의 논의를 담고 있는 책이다. 니어재단의 NEAR Watch Forum이 지난 1년간 북중관계에 대하여 집중 연구, 토의한 결과물을 담았다. 국내의 전문가는 물론 중국 내 북중관계 전문가들까지 27명의 이 분야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중국의 입장과 중국 내 여론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52) 중국의 대북정책은 사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회귀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의 성격이 짙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호주·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 자국 포위전략을 강화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한 축으로 북중관계 개선 카드를 들고 나왔다. 대신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 내 역할론에 충실하는 모습도 함께 부각시킨 것이다. 『한국일보』, 2016년 6월 17일.

는 것이다. 과거 스탈린 시대의 소련이나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은 북한보다 더 가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가난이 오히려 체제를 더 결속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게 생존론자들의 논리이다.

북한 체제의 유지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되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도 북한 생존론에 한몫을 했다.<sup>53)</sup>

김근식은 북한에서 20년 넘게 북한붕괴론이 난무했지만 김정일 체제는 3대 세습을 진행시키고 핵무장력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주체철을 만들어 냈고, 오랜 염원이던 비닐론 공장을 재가동했고,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라는 컴퓨터 자동화를 진전시켰다고 선전하고 있다. 물만 흐르면 막아서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형 발전소를 만들고 있다고 자랑한다. 나름대로 버틸 만하다는 자신감의 표현들이라고 하면서 북한 붕괴론이 허상임을 주장한다.<sup>54)</sup> 이재봉도 북한처럼 모두가 가난한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는 권력에 대한 불만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남한의 박정희 군사독재 체제에서처럼 불만이 나 분노가 생겨도 감시와 통제가 심하고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더구나 대규모 폭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sup>55)</sup>

외국학자들도 회의론적 입장이 우세하다. 아메리카의 소리(VOA) “2014 북한 체제” 기획보도인 미전문가들의 북한 급변상태 전망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sup>56)</sup>이 북한의 가까운 시일 내의 붕괴에 대해 회의적임을 알 수

53) 김계동, “북한 붕괴론과 생존론,” 『국민일보』, 2014년 5월 16일.

54) 김근식, “북한붕괴론이라는 유명,” KPI칼럼, 2011년 3월 3일.

55) 이재봉, 앞의 기고문.

56) 래리 닉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원,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장 (역사학과 교수), 미첼 리스 워싱턴 대학 총장

있다.<sup>57)</sup> 이들은 김정은도 김일성,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경쟁자들 간의 투쟁을 유도해 실질적 혹은 잠재적 도전자를 제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북한 정권은 국내의 위협을 견뎌내는 놀랄만한 역량을 보여 왔으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영향력이 크고, 반대 세력의 움직임은 없으며,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정권교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집권 2년 동안 유일 지도자와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고 평가했다.<sup>58)</sup>

- 
- (전 국무부 정책실장), 이성운 터프츠 대학 플레처 국제대학원 교수,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로렌스 코브 미국진보센터 외교정책 선임연구원 (전 국방부 차관보),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존 페퍼 정책연구소 소장,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국장,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소장, 고든 창 포브스 컬럼니스트 등은 붕괴론에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 57) 한편 아메리카의 소리(VOA) “2014 북한 체제”를 분석하면 북한 붕괴론에 대해 신중론을 펴는 이들도 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 (전 국무부 한국과장),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덴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 패트랙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수석연구원 등이 그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견고하면서도, 깨지기 쉬운 특성이 있다. 북한은 언젠가 극적인 분열 상태를 맞거나, 그런 상황을 일으키는 연속적인 사건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확신 있게 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북한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를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다. 조만간 붕괴될 수도 있고, 상당기간 끌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성택 처형을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북한이 언제 붕괴될 것인가에 대해선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본다.
- 58) 자유아시아 방송;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DNI-01292014152825.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DNI-01292014152825.html)>.

## V. 북한 붕괴론 논쟁 분석

지금까지 시기를 위주로 하되 또 그 시대의 사안별로 북한 붕괴론과 그 반론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북한 붕괴론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보면 우선 유형에 불문하고 급변사태 시 북한의 체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급변사태 시 국정운영이 완전히 마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군에 대한 실질적 지휘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북한에서 전시상황은 외부 세력과 대치상황에서, 급변상황은 주로 내부의 반정부 세력과 대치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체제위기라는 공통적인 상황으로 인해 전시를 대비한 기구들이 가동된다. 국가기구상으로 보면, 집체적인 군령권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개별적인 군령권은 최고사령관이 행사한다. 급변사태 시 군에 대한 지휘권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군핵심 관료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체제적 특성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부재하다. 또한 급변사태 시 북한적 요인, 다시 말해 당국의 대응이나 군 집단, 민간인 집단의 반응 등에 대해 다루이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sup>59)</sup>

또한 붕괴론 비판자들은 “행위의 주체로서의 북한을 배제한 채 우리 또는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개입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접근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sup>60)</sup> 그리고 다양한 연구 유형에도 불문하고 유

<sup>59)</sup> 정상돈·김진무·이강규, 『동독급변사태 시 서독의 통일정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3), p. 131.

<sup>60)</sup> 위의 책, p. 18.

사한 주제의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정치, 군사 등 특정분야의 거시적인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sup>61)</sup>

한편 급변사태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발생 원인 중심 연구와 발생 이후 대책 중심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sup>62)</sup> 구체적으로 급변사태가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가? 하는 것과 이후 어떠한 진화과정을 어떻게 밟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논의의 중심은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원인 혹은 발생 가능성, 급변사태의 발생 경로 등에 대한 연구로, 급변사태 발생을 전제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단순 논거를 바탕으로 흡수통일을 희망하는 보수적 인사나 탈북자 같은 북한 붕괴를 희망하는 분들의 희망적 사고를 담은 것이 대부분이다.

붕괴론 비판자들은 급변사태를 논하는 분들의 주장들이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곧바로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고는 보기는 무리라고 본다.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는

61) 김병욱, “복잡계에서 본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응방향,” 『통일부 2014년 연구보고서』, pp. 132~135.

62) 관련 연구들은 고재홍, “북한의 위기전망과 대응방안,” 『국가전략』, 통권 제47호 (2009); 김수민, “북한 급변사태의 개연성: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9권 3호 (2008);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책,” 『정책연구』 (2014년 봄호); 이기동,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협력,” 『북한학보』 제34집 2호 (2009); 이춘근·박상봉 저,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 전략』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 평화적 관리,” 『평화의 시각에서 보는 남북관계』, 2008년 특별심포지움; 주용식, “포스트 김정일 북한에 대한 전망: 국가 급변사태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허남성, “북한 급변사태와 대비 방안,”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성과와 대응 방안』 (국회 위기관리포럼, 2009); 홍현익,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 대응 방안,” 『세종정책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2013) 등이 있다.

정당성의 확보, 북한 집권세력들의 결집력, 경제강국 만들기 박차, 핵·경제 병진노선의 추구, 지도층의 대폭 물갈이로 강화되는 김정은 친정체제 등으로 북한 정권 붕괴와 대립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붕괴론자들이 놓치는 것으로 북한의 붕괴를 막는 국제적 요인도 있다. 북한의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국의 ‘현상유지 욕구’도 북한체제 유지의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현상이 파괴되거나 변하는 데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불안감을 갖고 있다. 즉 현상유지의 파괴로 인해 원하지 않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재연될 경우, 개입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운 미국과 중국이 특히 그러할 것이며, 또한 현상 변경이 야기시킬지도 모를 불이익, 즉 통일된 한국이 자국에게 적대적인 존재로 되거나 경쟁적 위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주변 4국의 입장이 일치하고, 후자의 경우는 특히 일본이 그럴 것이다.<sup>63)</sup> 또 다른 국제적 요인은 현재의 집단안보체제가 갖고 있는 성격으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냉전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최근 이와 같은 집단안보체제의 성격과 형태가 탈냉전시대의 일반적 영향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나 그 성립 과정에서부터 내재한 상호 대립적 성격은 여전히 한반도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고 있고 북한의 체제 유지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독일이나 예멘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목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통일 당시 동독이나 남예멘의 존립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반대하는 주변 강국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중국에게 순망치한의 관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임에 틀림없다. 같은 사회주의를 표방하

63) 정지웅, 『통일과 국력』 (서울: 학문사, 2002), p. 280.

고 있고, 전통적으로 우방 국가였다. 만리장성을 쌓을 만큼 외세에 민감했던 중국은 남한과 미국 주도로 통일될 경우 국경선이 세계 최강국 미국과 맞닿게 되는 상황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또한 지금 북한은 중국과의 대외무역으로 남한의 큰 지원 없이도 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두 나라 사이가 보다 밀접해 지고 있다. 물론 핵문제로 이견이 존재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사라지고, 미국과 남한 중심으로 통일된, 핵무기 없는 한반도보다 핵무기 가진 북한정권의 존재를 차라리 선호할 수도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배경이 북한체제 유지의 큰 축임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잘 살면서도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남한의 존재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 단결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 각기 독자적인 체제와 문화를 형성해 왔으며, 남북한의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이해가 서로 엇갈림으로써 현상의 포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오랜 대결관계가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단결하게 만들고 북한의 기득권으로 하여금 체제유지에 더욱 몰두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남북한은 서로 다른 통일방법론과 방안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남북간 이해관계의 불일치야말로 통일을 가로막는 본질적인 요인인 동시에 북한 체제 유지의 한 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치의 역사를 청산할 필요성이 있다. 즉 정 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대관계가 계속된다면 북한 집권층은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을 통해 위기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전시상태를 선포함으로써 체제 반발 세력들의 존립 자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가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 VI. 나오며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이후 3남 김정은에로의 권력승계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이후 김정은의 장악 과정을 보면서, 대북정책은 보다 현실적이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현실과 희망사항은 분명 다른 것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 역시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편승한 합의가 아니었다”며 “김정은 체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바탕해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64)</sup> 북한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혹은 그렇게 되도록 전략을 짜서 수행했는데, 무너지지도 않고, 혹은 무너지더라도 우리와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판단 미스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붕괴론에 대한 평가는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 북한 붕괴론을 벗어나서 보다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건대 현재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은 정치적 측면의 내구력과 통제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측면의 내구력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이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정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경제 병진 정책은 해외투자과 개발지원을 가로 막아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64) 『세계일보』, 2013년 2월 26일.

핵으로 인한 경제제재로 북한정권의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핵문제로 인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달의 북중 무역은 상승하였으며 지금 당장 체제 전환이나 체제 붕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한 붕괴론에 의존하기보다는 북한과의 끊임없는 정치 경제적 접촉을 통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 접수: 2016년 10월 31일 / 심사: 2016년 11월 1일 / 게재확정: 2016년 12월 10일

## 【참고문헌】

- 강철환. “장성택 실각은金正은이 망하는 길.” 『뉴스 바로』, 2013년 12월 6일.
- 고재홍. “북한의 위기전망과 대응방안.” 『국가전략』, 통권 제47호 (2009).
- 권희영. 『한인 사회주의운동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9.
- 김계동. “북한 붕괴론과 생존론.” 『국민일보』, 2014년 5월 16일.
- 김근식. “북한붕괴론이라는 유령.” KPI칼럼, 2011년 3월 3일.
- 김병욱. “복잡계에서 본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응방향.” 통일부 2014년 연구보고서.
- 김석우·홍성국.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서울: 기파랑, 2010.
- 김수민. “북한 급변사태의 개연성: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9권 3호 (2008).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진. 『2015년 김정은 급변 터질 것인가』. 서울: 늘품플러스, 2014.
- 놀랜드. 심달섭 옮김.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서울: 시대정신, 2004.
- 박관용.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 박관용.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서울: 경덕출판사, 2006.
- 박승덕. 『주체사상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 박창희. “북한 급변사태 시 중·러협력과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56호 (2012).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평화의 시각에서 보는 남북관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년 특별심포지움.
-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소치형.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개입과 한국의 대응책.” 『정책연구』 (2014년 봄호).
- 송영대. “북한의 사망과 북한의 장래.” 자유아시아방송 칼럼. 2011년 12월 21일.
- 시계무라 도시미즈. 신지호 역.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서울: 지식공작소, 1997.
- 안찬일. 『주체사상의 종언』. 서울: 을유문화사, 1997.
- 이기동.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협력.” 『북한학보』, 제34집 2호 (2009).
- 이재봉. “북한 붕괴,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프레시안』, 2014년 8월 22일.
- 이정철. “대북 제재와 북한의 개혁 퇴행. 인과관계의 검증- 시장 위축 vs. 시장 통

- 제.” 『북한연구학회보』, 16권 1호 (2012).
- 이중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춘근·박상봉 저.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1.
- 전경주.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과 대비』. 서울: 살림, 2012.
- 전현준. “북한 붕괴론의 허상.” 『통일뉴스』, 2013년 6월 24일.
- 정덕구·추수룡. 『기로에 선 북중관계 :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서울: 중앙북스, 2013.
- 정병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실존철학적 접근.” 『통일전략』, 12권 2호 (2012).
- 정상돈·김진무·이강규. 『동독급변사태 시 서독의 통일정책』.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 정성장. “장성택 숙청과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경제문화포럼 발표문 (2013.1).
- 정은미.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북한 정세 변화와 전망.” 2011년 11월 29일 북한전략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 토론문.
- 정은미.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와 분절적 구조.” 『북한연구학회보』, 16권 1호 (2012).
- 정재욱. “북한 급변사태와 보호책임(R2P)에 의한 군사개입 가능성 전망.” 『국방연구』 194, 신진연구논문집, 제55권 4호 (2012).
- 정지웅.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북한 정세 변화와 전망.”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가 주최 학술세미나 토론문 (2011년 11월 29일)
- 정지웅. 『통일학』. 서울: 태민, 2014.
- 주용식. “포스트 김정일 북한에 대한 전망: 국가급변사태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8권2호 (2009).
- 최평길. 『미리보는 코리아 2000』. 서울: 장원, 1994.
- 한병진. “독재정권 몰락의 급작성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가전략』, 18권, 1호 (2012).
- 허남성. “북한 급변사태와 대비방안.” 『한반도 위기인가 기회인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성과와 대응방안』. 국회 위기관리포럼 (2009).
- 홍현익.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 대응방안.” 『세종정책연구』, 2013.

- Brinton, Crane. *Anatomy of a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66.
- Cotten, James, "Civil Society in the Political Transition of Nor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 Eberstadt, Nicholas. *Is Contemporary North Korea a 'Pre-Revolutionary Polity?': A Summary of Finding*, Photocopy(March).
- Eberstadt, Nicholas. "The End of North Korea Washingt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99).
- Foster-Carter. "How Long Can North Korea Go On Like This?" *The Economics of Korean Reunification* 2, no. 1 (1997), pp. 28~35.
- Lankov, Andrei. "Pyongyang: Rules of Engagement," *Pacific Review* 16 no.4, pp. 617~626.
- Park, Han S. "Human Needs, Human Rights, and Regime Legitimacy." *In Understanding Regime Dynamics in North Korea*, ed., Moon Chung-in,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8), p. 224.
- Perry, William J.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1999)*.

『경향신문』, 『데일리 NK』, 『동아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오늘의 한국』,  
『중앙일보』, 『한국일보』, 『VOA』

이영일. "자스민 혁명과 김정일의 위기."; <<http://blog.daum.net/rh201/16264795>>.  
<<http://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0&dicaryId=97&searchCnd=0&searchWrd>>.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DNI-01292014152825.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DNI-01292014152825.html)>.  
<https://www.youtube.com/watch?v=DfMBQcbCXgU>.

## A Study on the debate about the collapse of North Korea

Jung, Ji Ung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has attempted to study for debates on the collapse of North Korea since the death of Kim Il Sung. For this, I classified the times as follows : 1) the collapse of Eastern Bloc, the death of Kim Il-sung and the march of hardship 2) the stroke of Kim Jong Il and the Jasmine Revolution 3) the death of Kim Jong-Il and the appearance of Kim Jong Un.

Next, I summarized the argument of scholars who had predicted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 and scholars who had predicted the preservation of the North Korea. And then, I analyzed the debates on the collapse-theory of the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is study, I wanted to serve for the desirable unification policy.

Up to present, there are so many opinions of internal and external surroundings about the collapse of North Korea, but the Kim Jong-Un's regime has been still existed since the death of Kim Jong Il. This shows the limits of the North Korea-collapse-theory.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n the short term, I insist tha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collapse should be low. Therefore, Our Government must pursue not only the unceasing political and economic contacts but also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on North Korea. If we propel the unification as the process, this will be more realistic.

Key words: Kim Jong-un's regime, The collapse of North Korea, The survival of North Korea, Durability.

정지웅(Jung, Ji Ung)

---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통일학 1』(2014), 『통일시대의 준비와 한반도판 마셜 플랜』(공저, 2014),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사회과학연구 2013) 등이 있다.